전남도, 에너지기업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5일까지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에서 '에너지위크' 개최

14개 기업 참여… 재생에너지·전략인프라 분야 협약 등 성과

전라남도가 지역 에너지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일까지 5일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위크를 개최했다.

에너지위크는 전남도가 지역 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한 기업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태양광·소수력 발전 기업 등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2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에너지위크에서는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 분야 정책교류와 기술협력, 시범사업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정책 우호교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어 열린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선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 균형을 위한 키르기스스탄의 역할을 소개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남도 에너지정책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수출상담회에선 전남 12개 에너지기업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관계자, 현지 바이어가 다수 참여해 기술 소개와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전남 기업 컨소시엄은 현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4~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해 에너지위크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타슈켄트에서는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와 바이어를 상대로 지역 기업 컨소시엄의 기술 소개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재생에너지·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위크를 통해 전남도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에너지 기업이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출생지원정책 성과… 출생률 회복세

1월~9월 4878명 출생… 출생증가율 2개월 연속 특광역시 1위

아이돌봄·임신부 가사돌봄·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확대 호응

올 2514억 투입 결혼·임신·육아 전과정 함께하는 시스템 구축

올해 출생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 광주시가 출생증가율 2개월 연속 특·광역시 1위를 차지하는 등 출생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정책은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손자녀 가족돌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등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지역 2524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5가구(9.31%) 늘어난 수치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200% 가구까지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대상을 확대(기존 중위소득 150%까지)한 결과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임시보육·놀이활동·등하원 등을 돕는 제도로, 아이의 생활을 돌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부 가정을 찾아가 청소·정리정돈 등 가사를 돕는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올들어 10월까지 1590명이 이용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00명이었던 지원 인원을 올해 2000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에 2514억원을 투입, 결혼·임신·육아·돌봄·일가정 양립 전반에 걸친 '광주아이키움 2.0' 돌봄정책으로 출산 전 지원뿐 아니라 출산 이후의 자녀 양육까지 함께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 출생지원 정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손자녀 가족돌봄, 입원아동돌봄, 삼삼오오 이웃돌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등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의 이같은 정책 성과로 지난 7월 결혼·출산·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의 정책 확대는 최근 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광주 출생아 수는 550명으로 전년 동월(482명)대비 68명(14.1%) 증가해 출생증가율 특·광역시 1위,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했다. 광주시 출생증가율은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9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48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19명) 증가해 출산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의 근간이 되는 혼인 건수도 1월~9월 4540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358건) 증가했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빈틈없는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추가 확대(중위소득 200%→250% 가구)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연령 확대(3·5세→3·4·5세)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0세반 교사-아동 비율 개선(3:1→2:1) ▲0~2세 보육료 인상 ▲3~5세 누리과정 추가지원 연령 확대(4·5세→3·4·5세) ▲아침돌봄수당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 인 기자

광주·전남 고용 부진 장기화… "산업 침체·인구 감소 동시 압박"

한은 광주전남본부, '최근 지역 고용 현황·시사점' 분석

광주·전남지역 고용이 산업 침체와 인구구조 변화가 겹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3일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고용 현황·시사점 보고서'에서 주력산업 생산 부진, 청년층 감소,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는 최근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됐으나 청년층 고용 비중은 크게 줄고 고령층 비중은 확대됐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중심의 고용 악화와 자영업 급감도 이어졌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온라인 소비 확산과 무인화 흐름이 자영업 축소를 가속했고 고소득·전문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유출이 지속된 점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남은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 중이며 농림어업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노동공급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제조업 비중이 낮은 구조 속에서 농림어업 취업자는 2023년부터 급감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 대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 가속,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중심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숙련 일자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영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역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활용도를 높이고 대규모 물류시설 유치를 통해 물류·유통 분야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남의 농림어업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마트농업·스마트양식·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술 생태계 구축, 농업+관광+문화 연계 6차 산업화 추진, 돌봄·복지 등 농촌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고용 부진은 단기 경기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일 기자

이마트24, 광주첨단에 '차세대 가맹점 표준매장' 호남권 1호점 오픈

이마트24는 차세대 가맹점의 표준 모델이 될 프로토타입 매장 '광주첨단본점'을 5일 호남권 지역에 처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매장은 약 34평(113.3㎡) 규모로 ▲라이브 플레이그라운드 ▲프레시레인 ▲CVS에센셜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입구 전면에 위치한 플레이그라운드존에는 서울대빵 시리즈, 초코카스테라 카다이프모찌, 손종원 셰프 협업상품, 성수310 컵커피 등을 진열했다.

프레시레인은 냉동·냉장, 주류·음료, 프레시푸드, 디저트, 신선 상품으로 이어지는 직선형 배치를 했다. CVS에센셜은 스테디셀러상품, 생활서비스(택배) 등 필수 주력 상품군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마트24는 이번 프로토타입 매장을 통해 고객 경험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매출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상품경쟁력 강화와 상생지원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오는 16~18일 경영주를 초청해 상품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트24 최진일 대표이사는 "신규점의 기본이 되는 프로토타입점을 통해 경영주분들이 매장 구성 기준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고용·노동법에 사업주 처벌 규정 233개 '과도'… 기업활동 위축"

광주경총 "처벌 중심서 행정 제재 중심 전환해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를 비형사적인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는데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233개(6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 처벌규정이 1개 이상인 법률은 25개 중 19개였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근로자참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광주경총은 지적했다. 특히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해 사용자의 소극적 경영과 노무관리 위축 등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은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 확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수동적 규정 준수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 안전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과도한 형벌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팔 기자